

연구총서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1998년을 전후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적·질적 차원에서 크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안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만큼, 과감한 인식의 전환은 물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서 사회문화분야는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여왔으며,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관광분야를 포함한다. 남북교류·협력에는 남북한 주민의 접촉, 남북한 왕래,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협력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2. 남북관계와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1980년대 당국간의 조심스러운 교류·협력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역시 의미있는 수준까지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8년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7.7 특별선언’으로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관계 제도화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8년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으며,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1998년의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남북왕래형태로 진행된 통일농구대회와 문화예술분야의 방북 공연이 성사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향후에도 체육과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부문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전체적으로 1989년 이후 사회문화교류는 경제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대북포용정책실시 이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확대추세에 있다. 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까지 사회·문화부문의 남북간 주민접촉이 분야별로 성사된 건수는 교육·학술 149건(1,941명), 종교 111건(867명), 문화·예술 87건(702명), 체육 58건(518명), 언론·출판 53건(146명), 관광(실무분야, 금강산관광객제외) 47건(145명), 과학·환경 43건(282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학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남북한 왕래교류보다는 대부분 제3국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제3국에서의 접촉을 선호하며, 중국 지역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학술교류는 점차 정례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최측도 남북한이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종교계는 북한지역 동포들에 대한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북한 식량문제 등에 인도적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술분야에 이어 북한측과의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했다. 종교분야의 교류·협력도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북도 상당수 성사되었다. 이는 종교계의 경우 대북지원성 교류가 많고, 북한의 대외 이미지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순수 종교교류보다는 경제적 실익이 동반되는 종교계의 방문을 선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남북한 주민접촉은 북한측의 기피와, 공연 등의 경우 상당한 준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1990년 평양에서의 「범민족통일음악회」, 서울에서의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등 왕래교류가 진행된바 있으나, 이후 '98년의 리틀엔젤스 평양공연까지 남북왕래교류형태의 문화·예술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교류·협력은 대체로 제3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이루어지거나 남한 인사들의 개별적 방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이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99년에도 방북공연이 성사되었다.

언론·출판분야의 특성상 북한측이 체제유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97년 이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1997년에 문화방송의 '금강산 자연다큐멘터리 제작' 등 사업성이 있는 교류가 성사되었으며, 1999년 9월 평양에서 거행된 통일농구단의 시합이 녹화 또는 생중계 방식으로 남한에 방영되었다는 점에서 방송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가 북한 위성 TV방송의 국내 시청을 허용한 것도 방송교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분야의 남북왕래교류로는 1990년대 초반 「남북통일축구대회」 등 왕래교류를 비롯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으나 1991년 8월 북한유도선수의 망명과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전반적으로 체육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99년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는 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와 관련, 평양에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고, 현대농구단의 방북 및 북한선수단의 서울 경기가 실현되었다. 이와 같은 체육교류는 현대와 북한측간에 향후 확대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남북 체육교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관광교류는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기까지는 관광을 위한 실무차원의 접촉이 대부분이었으나, 1998년의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이는 대규모 일반주민들의 관광 목적상 방북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11월 18일로 금강산관광사업은 1주년을 맞았으며, 14만명이 넘는 남한사람들이 금강산을 관광했다.

4.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

90년대 중반까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지녔던 본질적인 한계는 스스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냉전체제하에서 교류·협력은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교류·협력이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한 왕래교류보다는 제3국에서의 접촉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부

분의 교류가 협력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민접촉에 그쳤다. 특히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남한주민의 방북에 비해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대북포용정책이 구사된 1998년을 전후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포용정책과 북한의 실리추구입장에 기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도 활성화되었다. 방북을 통한 교류·협력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남북 주민접촉 및 방북이 일반주민들에게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급증했으며, 과거와 달리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자율적 토대형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5.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기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통일에 앞서 남북한의 민족간 통일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분야를 제한했던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독자적 영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사회·문화의 핵심적 요소인 민간분야가 자율적인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체제의 개

방과 개혁에 자극이 된다는 거시적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해 실리추구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응하고 있는 바, 북한의 자세변화추이를 주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과거 소수 선별적 인원의 비정기적 남북접촉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와 같은 수시 방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 하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교류·협력체제와 상충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지속적 정비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의 방북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과거의 방북교육체제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북 교육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가 지니는 공공성의 의미를 감안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문화분야의 특성상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민간분야의 자율적 교류·협력이 정착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운동의 물적 기반이 튼튼한 서구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기초가 취약하다. 통일분야의 민간단체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문제의 경우 NGOs의 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간분야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세금감면 및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은 실질적 지원의 의미를 지니며, 민간 통일기금형성 방법으로 ARS모금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체육교류와 병행됨으로써 여타 사회문화 교류·협력과의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사회문화의 각 분야로 연계·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육분야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성과가 크고, 실현성이 높은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I. 서론	1
II.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4
III. 남북관계와 사회문화 교류·협력	8
1. 냉전체제하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8
2. 7·7선언이후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0
3.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3
IV. 부문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20
1. 학술분야	21
2. 종교분야	27
3. 문화·예술분야	31
4. 언론·출판분야	35
5. 체육분야	37
6. 관광분야	40
V.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	43
VI.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50
1.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50
2.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55

가. 법·제도의 정비	55
나. 물적 기반의 확충	57
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및 상호보완적 관계설정	62
라.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65
마. 금강산 관광사업의 연계발전 및 추진분야의 개발	69
VII. 결론	73
참고문헌	76

- 표 목 차 -

<표 1> 남북 인적교류 현황	16
<표 2>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현황	18
<표 3> 남북한 주민접촉현황(분야별)	21
<표 4> 금강산관광객 현황	42
<표 5>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실적	59
<표 6> 주요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60

1. 서론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에 중요한 것은 분단보다 더 장구한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특성을 회복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의 접촉이나 경제적 동기를 주축으로 하는 경협외의 한계를 벗어나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회문화 공동체형성을 지향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평화적인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988년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7.7 특별선언」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대체로 그 실질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교류·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며,

2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배제, 그리고 화해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단계에서 무리한 통일의 추진보다는 남북간 평화정착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건설과정으로서 현 시기가 화해·협력단계로 설정됨으로써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대립관계 청산 및 신뢰구축이 중요한 목표로 등장했다. 이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분단상태의 평화적 관리 및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쌓아 가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남북주민간의 대규모 인적교류를 포함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교류·협력의 한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도 체제생존이라는 문제에 봉착,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작고, 대외 홍보효과가 크며, 대외원조의 유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구사에 있어서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실례로 1998년 한해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하고도 정부가 민간인의 방북을 승인한 1989년 이후 1997년까지 보다 많은 방북이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증가하였다. 종교와 문화·예술부문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금강산관련 관광객의 방북은 급속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대규모 인적접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상당한 개선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법적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인적 교류에 대한 대비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남북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발전방향의 설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동안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사회와 문화는 인간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므로 그 정의 자체도 매우 포괄적이다.¹⁾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상당히 넓은 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에서 사회문화분야는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여왔으며, 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된 문건이나 논문들에서도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관광분야가 주요영역으로 나타난다.²⁾ 본 연구에서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분류에 있어 이와 같은 용례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 사회학적으로 사회란 “일정한 영역내 구성원들 사이의 유형화된 상호작용의 체계”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G. Ritzer, et. al., *Sociology* (Allyn & Bacon, 1979), p. 15. 문화의 개념도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총체(complex whole)”로서 생활양식이라는 종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E. B. Tylor, *Religion in primitive culture* (NewYork: Harper and Row, 1958), p. 1. 이광규, 「문화인류학개론」(서울: 일조각, 1983), p. 35에서 재인용
- 2) 「남북기본합의서」의 16조는 사회문화교류에 해당하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나열된 분야는 ‘여러 분야’의 예시이기 때문에 종교 등의 분야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개요」(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2), pp. 184-192. 「사회문화공동위수첩」(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5)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추진사례를 열거하면서 주요분야로 출판보도, 학술, 예술, 종교, 체육분야를 예시하고 있으며,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서울: 통일원, 1996)도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분야를 사회문화분야로 열거하고 있다. 이외의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등에서도 유사한 구분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접촉, 남북한 왕래,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협력사업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 내용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³⁾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간 주민의 접촉, 왕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그리고 협력사업은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접촉’은 남한과 북한주민사이의 정보나 메시지의 교환과정을 말하며, 쌍방간의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을 경우 접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직접적인 대면이외에 중개인 혹은 여타의 통신수단을 통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한다.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관문점뿐만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한 방문 역시 남북간의 왕래에 해당한다. 왕래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해당분야에서 상대방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3)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1996. pp. 1-26. 참조.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조. 또한 1997년 6월에 제정된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은 보다 세밀한 규정을 하고 있다.

합의에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연속성 있는 행위들을 말한다.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포르투갈) 등에서 남북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진바 있으나 이후 1997년 12월 중앙일보사 부설 「통일문화연구소」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이 있기 까지 실적이 전무했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 실시와 아울러 협력사업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인 사회문화분야에서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민족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동의 요소들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질화를 줄여나가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이 모든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문화공동체의 기초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와 ‘문화’는 인간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광의의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은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구조적,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확대된 의미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전제할 때 이를 지향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민간의 접

측으로 인한 이질성 해소 및 상대의 사회문화에 대한 감수성 고양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Ⅲ. 남북관계와 사회문화 교류·협력

1. 냉전체제하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당국간의 조심스러운 교류·협력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역시 의미있는 수준까지 진전되지 못하였다.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는 냉전체제의 고착화라는 상황하에서 매우 제한된 형태의 문제제기 혹은 정치적인 선전의 장에 머물렀다. 이시기 북한은 통일전선전략차원에서 다양한 선전성 제안을 해왔다. 1957년 남북언론인 교류제의, 1958년의 제 17차 올림픽 대회를 위한 단일팀 구성제의, 1965년 인민배우 박영신의 남북공동 영화 제작 및 연극경연대회제의, 그리고 1966년 북한 언어학자 홍기문의 기자교류제의와 조류학자 원홍구의 과학자교류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않은 채 '대남호소문'의 형식으로 제기되었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제의로 끝나고 말았다.⁵⁾

1970년대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적십자회담으로 대표되어 진다. 1970년대의 남북한간의 교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남북한 내부의 정세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팜독트린」과 「닉슨독트린」의 천명으로 한반도 주변에는 유동적인 정세가 조성되었다.⁶⁾ 또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미소 양극구도에서 중공과

5) 최대석, “남북한 문화교류활성화방안 연구”, p. 230.

미·일의 접근에 따른 다극화체제로 변화했고, 월남전의 종전과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변화는 남한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게 만들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남북 대화가 추진되었다. 반면 북한측은 월남의 공산화에 자극 받았으며, 미국의 일련의 태도변화를 아시아에서의 후퇴로 간주하였다. 또한 남한내의 정치적 상황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남북대화를 통일전선전술에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1년 최두선 대한 적십자사 총재가 남북간 가족찾기운동을 북한측에 제의했고, 북한측의 손성필 위원장이 화답함으로써 당해 8월부터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⁷⁾ 이에 따라 남북한적십자사는 1977년까지 비교적 활발한 접촉을 가졌으며,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 적십자사는 1978년 3월 제 8차 본 회담을 위한 제 26차 실무회의를 무기 연기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끝으로 교류·협력을 중단하였고, 이후 1984년 남한 수재에 대한 북측의 지원제의 이전까지 실질적인 남북적십자사간의 교류는 공백기를 맞이했다.⁸⁾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개설, 7.4남북공동성명 등 정치적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적십자사간의 접촉은 의도했던 이산가족간의 만남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

6) 1969년의 콰독트린은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1970년의 너슨독트린은 콰독트린의 전세계적인 적용으로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보해왔다.

7) 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이와 같은 제의가 가능했던 것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통해 대북한 유화제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한간의 장벽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인도적인 방안들을 제의할 용의가 있으며, 개발과 건설을 통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8) 남북적십자사간의 구체적인 접촉일지와 결과는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수첩」, 1994. 참조.

다. 따라서 1970년대의 남북한 교류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서도 주민들간의 실질적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였다.

1980년대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한 당국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LA올림픽단일팀 구성 등을 위한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이 있었다. 또한 남북경제회담과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 남북간의 대화창구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등이 성사되기도 했으나 이후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2. 7·7선언이후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988년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7·7 특별 선언」으로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기 시작했다.⁹⁾ 또한 후속조치들로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되었고, 동년 3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의 방북과 이들의 실정법위반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행선고, 이에 따른 북한정부의 비난 등 일련의 과정은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민감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사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1990년 2월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문화교류5원칙」¹⁰⁾

9) 7·7선언은 남북교류의 적극추진, 남북간의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공산권 자료의 일반개방과 월북 및 남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부분적인 해금조치를 취했으며, 남북교육당국회담 등이 제의되었다.

10) 「남북문화교류의5원칙」의 내용은 문화교류과정에서 분단이전의 민족전통문

을 발표했으며,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¹¹⁾도 조성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은 법적인 근거를 갖게되었고, 이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¹²⁾ 따라서 1990년대는 제도화된 틀 내에서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남북관계 제도화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다. 1992년 5월에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년 9월에 「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3년 3월 인도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의 방북이 허용되었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 수립되었다. 그러나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 시까지 남북경협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남북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94년 10월 미·북한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북경수교건설지원 체제가 갖추어 졌으며, 1994년 11월에는 남북경협

화를 우선 교류한다는 것,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하는 표현방식의 지양, 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경주 등이었다.

- 11)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지원, 촉진시키기 위해서 1990년 8월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왕래 자금지원, 문화 학술 체육분야 협력사업 자금지원, 민족공동체 회복사업지원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 1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이전까지 남북한 주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체계내에서 다루어 졌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교류협력의 승인권이 통일원으로 일원화되고, 순수한 목적의 남북교류협력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1997년 6월에는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에 대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따라서 1990년대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제도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 역시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고'¹³⁾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분야에서 민간분야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웃사랑회'와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각종 종교단체를 비롯 다양한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벌였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교류는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과 잠수함사건이 발생했던 1994년과 1996년의 경우 북한한 주민접촉과 남한주민의 방북이 전년도에 비해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 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정부는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접촉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¹⁴⁾ 따라서 1996년의 남북교류·협력은 전년도에 비해 위축되었으며, 특히 방북은 28건으로 1995년 53건의 절반수준에 머물

13) 그러나 정부는 대북 접촉 및 교류에 관한 허용기준으로 ①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②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③교류사안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운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의 17조에 제시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은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왕래와 접촉이라는 뜻이며, 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개요」, p. 192.

14) 따라서 1996년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남북교류·협력이 연기되었다. 96년 12월 부산에서 북한측 관계자의 참석하에 개최예정이던 '해운산업의 전자자료교환(EDI)에 관한 실무회의'가 97년으로 연기되었으며, 96년 11월 예정이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의 남북한간 관제협상 2차 실무접촉도 무기 연기되었다. 「중앙일보」, 1996.11.3.

렀다. 그러나 1996년 12월 북한은 북한의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으며, 이를 남한정부가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¹⁵⁾ 따라서 이와 같은 분위기는 사회문화교류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1997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남한 주민의 방북도 증가했다.

3.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997년 증가추세를 보인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8년 신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의 실시는 현 단계에서 무리한 통일의 추구보다는 통일의 기초 형성에 주력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북포용정책은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3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실현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는 대북포용정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15) 북한당국은 평양방송과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이 성명에서 "막심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1996년 9월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발방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측은 또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관측들과 함께 힘쓸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긍정적 검토 용의를 시사했다. 「중앙일보」, 1996.12.29.

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또한 남북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에 따라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98년 3월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¹⁶⁾가 발표되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이후 실시된 적십자의 대북지원에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등 6개단체 6명이 구호물자 인도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3개 단체 5명이 대북지원 협의 목적으로 방북하였다. 또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등의 행사시 언론사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 협력사업이 승인되었다. 정부는 또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원칙」의 적용을 천명했으며, 구체적으로 98년 4월 남북경협 추진 여건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¹⁷⁾를 취했다. 이에 따라 대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금

16)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민간단체 대북지원 참여 확대
 -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참여 허용
 - 대북지원 협의·모니터링 목적의 접촉 및 방북 허용
- *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 완화
 - 자선음악회·바자회 등 이벤트성 모금행사 허용
 - 언론사·기업체의 모금행사 협찬 및 무기명기탁 허용
- *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17) 남북경협활성화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북요건 구비시, 승인을 원칙: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및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 접촉(20일→15일), 방북(30일→20일)
- 범위내에서 「포괄승인 품목」 확대,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경제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 승인절차 간소화
- 협력사업의 투자규모제한 폐지,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

강산관광사업은 교류·협력활성화 정책의 결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998년 한해 금강산관광객 10,554명을 제외하고도 3,317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수치는 정부가 민간인의 방북을 승인한 1989년 이후 1997년까지의 총 방북인원 2,408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표 참조>.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증가하였다. 1998년의 경우 사회·문화부문에서 남북한 주민접촉도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1998년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한 사회문화분야의 방북은 238명으로 전체 방북자의 7.2%에 달해 '97년 2.6%(2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999년의 경우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양적인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통일농구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선수단의 서울·평양 상호방문과 남한 대중예술인들의 방북공연 성사, 그리고 통일농구대회와 방북공연의 중계방송 성사 등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농구대회를 통한 북한 관계자 및 선수단의 남한방문은 93년 이후 처음이다.

<표1>남북 인적교류 현황 ('89.6.12 ~ '99.10.31)

(건/명)

연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사	비고
1989	36(70)	21(22)	15(48)	-	-	-	
1990	235(687)	206(652)	29(35)	-	-	62(377)	
1991	753(2,195)	685(2,047)	41(70)	-	-	266(1,173)	
1992	801 (2,420)	744 (2,250)	72 (230)	-	-	238 (1,015)	27(78) * 전년이월
1993	1,172 (2,220)	1,148 (2,182)	21 (36)	-	-	313 (707)	12(18) * 전년이월
1994	1,338 (2,864)	1,261 (2,673)	28 (63)	-	-	237 (691)	15(20) * 전년이월
1995	1,011 (2,769)	1,007 (2,703)	44 (108)	-	-	494 (1,222)	64(148) * 전년이월
1996	729 (2,338)	692 (2,029)	53 (406)	-	-	465 (1,003)	24(106) * 전년이월
1997	1,387 (2,969)	1,340 (2,850)	17 (38)	2 (4)	-	516 (1,191)	8(9) * 전년이월
1998	4,628 (6,714)	4,567 (6,623)	13 (26)	10 (31)	-	856 (1,890)	36(86) * 전년이월
1999	7,441 (8,894)	7,287 (8,402)	14 (49)	4 (318)	210 (244)	764 (1,436)	74(120) * 전년이월
계 Total	19,531 (34,140)	18,958 (32,433)	347 (1,109)	16 (353)	210 (244)	4,211 (10,705)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10월호, 1999.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활발히 추진되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은 1주년이 되는 99년 11월 14만명을 상회하는 남한주민이 관광을 다녀옴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그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97년까지 예비단계인 협력업자 승인과 최종단계인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이 각각 3건에 불과했으나, 98년이후 협력사업자 승인이 14건, 협력사업 승인이 10건이 이루어 지는 등 크게 증가했다.

<표2>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현황

(99.11.현재)

사업자	사업내용	금액	승인일
▲대한탁구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91.4.24~5.6)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일본)	7억 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91.3.21
▲대한올림픽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91.5.27~6.4)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포르투갈)	1억 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91.5.1
▲통일문화연구소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북한지역 사유적지)	6만불	'97.12.10
▲연변과기대후원회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영 (나진·선봉)	500만불	'98.6.5
▲한민족복지재단	계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나진·선봉)	240만불	'98.6.5
▲스포츠아트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불	'98.4.29
▲한국사진학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 평양) 및 사진집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98.4.29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98.6.20
▲(주)CNA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 공연	100만불	'99.4.16
▲SN21엔터프라이즈	「남북대중음악회」 방북 공연	60만불	'99.8.5
▲현대아산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체육교류사업	5,750만불 (남측3,420만불)	'99.9.20
▲계명프로덕션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불	'99.9.22
▲우인방컴퓨터니케이션 남북자동차경주협회	통일염원 금강산국제렐리 (서울→평양→속초→금강산)	100만불	'99.11.11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10월호, 1999.

향후에도 대북포용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사업이 확대되면서 1999년 개최된 통일농구대회 등 관련된 교류·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999년에 나타났듯이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의 교류가 증가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분야의 협력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IV. 부문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전체적으로 1989년 이후 사회문화교류는 경제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확대추세에 있다. 이는 대북포용정책기조가 유지됨으로써 교류·협력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고, 민간분야의 북한주민접촉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까지 사회·문화부문의 남북간 주민접촉이 분야별로 성사된 건수는 교육·학술 149건(1,941명), 종교 111건(867명), 문화·예술 87건(702명), 체육 58건(518명), 언론·출판 53건(146명), 관광(실무분야, 금강산 관광객제외) 47건(145명), 과학·환경 43건(282명)으로 집계되었다. 사회문화부문중에서도 학술 및 종교,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다른 분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특히 1998년 양적인 증가세를 보인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9년 문화예술분야의 이벤트성 방북공연들이 성사되었고, 남북한 농구단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남북한 주민접촉(분야별, '89. 6.12 ~ '99. 10.31)
(건/명)

분야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사
이산가족	13,854 (14,386)	13,667 (14,199)	1(1)	-	186(186)	1,833(2,112)
경 계	3,311(8,300)	3,216(8,048)	76(210)	6(15)	13(26)	1,678(2,801)
교육학술	475(3,614)	436(2,994)	34(308)	3(306)	2(6)	149(1,941)
문화예술	320(1,448)	272(1,348)	45(90)	-	3(10)	87(702)
체 육	189(905)	179(865)	6(23)	3(11)	1(6)	58(518)
종 교	327(1,562)	274(1,416)	53(141)	- (5)	-	111(867)
언론출판	261(688)	220(589)	38(90)	1(7)	2(2)	53(146)
관광 (실무)	166(524)	158(496)	8(28)	-	-	47(145)
교통통신	60(198)	60(198)	-	-	-	33(119)
과학환경	197(790)	184(765)	9(13)	1(4)	3(8)	43(282)
대북지원	37(163)	37(160)	- (2)	- (1)	-	33(120)
기 타	334(1,562)	255(1,355)	77(203)	2(4)	-	86(952)
계	19,531 (34,140)	18,958 (32,433)	347 (1,109)	16 (353)	210 (244)	4,211 (10,705)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및 인도적사업동향」, 10월호, 1999.

1. 학술분야

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까지 학술분야에서 남북한 주민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149건(1,941명)으로 접촉건수 및 인원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학술분야의 경우 남북한 왕래교류¹⁸⁾보다

18) 학술분야의 남북한 왕래교류는 1991년 11월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1992년 9월 '평양동북아 경제포럼', 1992년 9월 '제3차

는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북한측은 이와 같이 제 3국에서 접촉을 선호하며, 중국지역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¹⁹⁾ 중국의 연변대, 요녕대, 길림대, 북경대 등에 소속된 연구소와 오사가 경제법과대, 국제고려학회 등이 남북한 접촉의 중개인 역할을 했다. 학술교류는 점차 정례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최측도 남북한이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분야의 경우 방북을 통한 교류·협력이 미미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술분야의 경우 대북지원성 교류·협력의 소지가 타분야에 비해 작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경제학 및 통일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많았으며, 이는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확보라는 북한의 전략과 관계가 있다. 북한은 경제분야의 학술교류를 경제난 해소와 해외로부터의 대북투자유치와 연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분야의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대외이미지 개선 및 통일전선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포용정책기조가 유지된 1998년도의 경우 제 3국에서의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협력사업 및 자매결연사업 등이 성사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내용이 한층 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연변과학기술대학후원회」에 대해 나진·선봉지역 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는데, 이는 학술분야의 협력사업의 첫 사례이다. 또한 성균관대학의 정범진총장이 방북하여 개성의 고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 세미나', 그리고 1993년 11월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있었다.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 실무안내」, 1996, pp. 46-47. 참조.

19) 중국이 선호되는 이유는 연변지역 교포들이 과거 북한과의 관계 등으로 인적인 연줄을 확보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점등이 작용하여 북한측의 참가가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균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기타 학술교류를 협의하였는 바, 이는 남북 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이다. 또한 경남대, 강원대 총장 등의 방북이 이루어 졌다. 1999년 7월에는 남북한의 학자 및 연변의 조선족 학자들의 참여하에 '새천년을 향한 조선족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변대학 창립50주년 기념학술회의가 열렸다.²⁰⁾

학술분야의 부문별 교류·협력실태는 다음과 같다.

통일문제분야에서의 학술교류·협력은 초기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경우 대체로 국제문제 및 국제정치차원에서 동북아 관련국들과의 관계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구축 및 통일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학술교류는 남북한과 주변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주최측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주최한 학술회의에 남북한의 학자들이 초청되는 형식이였다. 소련과학아카데미에서 주최한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화·평화·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90.9.4-6, 소련 블라디보스톡), 조지아공대 전략연구소와 중국 세계관찰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안보회의'('91.3.23-25, 중국 북경), UN군축국 주최의 '92 상해 유엔군축회의'('92.8.17-19, 중국 상해), 말레이시아 국민전선 주최의 '제1차 동아시아 차세대 정치인 회의'('94.8.3-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동경, 영국 런던 등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들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학자들간의 학술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남북한의 관련 당사자들이 주최하는 형태의 학술교류들이 나타났으며, 점차 정례화, 다양화 하는 양상

20) 통일연구원후원으로 연변대학민족문제연구원과 한국미래정책학회가 주최한 이 학술회의는 종합학술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어, 역사, 인문사회, 예술분과 등에서 다양한 학술교류가 이루어 졌다.

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통일포럼과 북한사회정치학회는 96년 이후 '남북해의학자 통일회의²¹⁾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를 주제로 매년 정례적으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한이 주최한 학술회의는 남북 신뢰회복추진협의회와 북한민족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모임'(97.6.30.-7.1, 중국 베이징) 등이 있으며, 버클리대 한인학생회 주최의 '한반도 통일문제심포지움'에서도 반복적인 학술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특히 제4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97.9.13-17, 중국 북경)에는 250여명에 이르는 남북한 대학생(남한학생 167, 북한학생 85명)들이 참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 세미나는 99년에도 개최되었다.²²⁾

경제학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90년대 초반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타 분야에 비해 교류·협력 성사건수가 많았다. 경제분야의 경우 학술교류주제는 '제3차 동북아 경제공동체국제심포지움'(90.10.9-12, 중국 북경), '환동해 경제권 국제 심포지움'(91.11.22, 일본 오사카),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포럼'(92.8.25-28,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1세기 동북아 국제 학술회의'(95.7.18-21, 중국 심양),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학술회의'(96.5.8, 중국 심양) 등 남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 및 발전에 관한 경우가 많았다. 학술

21) 남북 해의학자 통일회의는 99년에도 개최되었다(99.10.26-27, 중국 베이징). 동아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남측에서 백영철 한국통일포럼 회장과 권만학(경희대), 김순권(경북대) 교수등이, 해외에서는 고병철(미국 일리노이대), 강희웅(미국하와이대), 송두울(독일 뮌스터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김경남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과 서원철 김형직사범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2) 99년 7월 남북한 청년학생 2백3명(남측1백43,북측60)은 베이징에서 제5차 남북청년학생통일세미나를 열고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는 남측에서 세계평화청년연합-전국대학원리연구회 회원과 교수들이, 북측에서는 각 대학 학생들과 북한의 교수진 및 조선아시아태평양중앙위원회 지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 개최장소는 주로 중국과 일본이었으며, 특히 중국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 졌다. 북한측은 경제분야의 학술교류를 외부 투자유치 및 홍보에 이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학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일본, 중국의 관련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제 3차 조선학 국제 학술토론회'(90.8.2-5, 오사카), '구주한국학회 제 15차 학술회의'(91.3.22-26, 프랑스 듀르당) 등을 제외하고는 '고려학 소장학자 학술토론회'(91.7.29-31, 중국 연길시),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94.2.20-22, 중국 북경) 등 대부분 북경, 연변, 연길 등 중국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역사학의 경우도 북한지역보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의 제3국교류가 주축을 이루었다. '고구려문화 국제 학술회의'(93.8.11-14, 중국 접안시) 및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97.7.20-21, 일본 동경)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원시·고대문명의 재검토 학술회의'(95.8.4-6, 일본 오사카) 등 고구려 및 고대사 관련학술회의,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발굴'(93.4.15-17, 연변대학)과 같은 유적 발굴 등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의 인접지역에서의 학술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징중의 하나는 교류·협력분야가 주로 고구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고대사의 경우 남북한 체제 및 정치적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류·협력이 비교적 수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변국 학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중국 등에 관련유적이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학술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남북한 학술 교류·협력의 특징은 분야별로는 컴퓨터와 정보처리분야 등이 많고, 남북한측의 참가자의 수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91 국제과학기술 학술대회'(91.8.19-24, 중국 연길)에는 남한측 87명과 북한측 45명이

참석했으며, 94년에 열린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94.8.5-10, 중국 연길)에도 남한측 24명, 북한측 25명 등 다수의 인원들이 참석했다. 북한측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다른 학술교류와 비해 다수의 관계자들을 참석시키고 있다. 특히 남한의 '국어정보학회'와 '북한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가 주최한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중국 연길)는 '94, '95, '96년에 걸쳐 해마다 열렸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학술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96년 8월에는 한글 컴퓨터 처리에 필수적인 기술적 차원의 공동안을 채택 합의문으로 발표했다.²³⁾ 또한 '99년에는 제4차 대회가 96년 3차 대회 이후 3년만에 재개되어 컴퓨터용어 통일 사전을 마무리, 연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짐으로써('99.8.15) 학술교류의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의를 나타냈다. 남북한 학술 공동 연구의 시금석으로 주목을 모았던 제4차 대회에서 남북한 학자들은 5년여를 끌어온 남북한 컴퓨터용어 통일 사전을 마무리, 연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출간된 남북한 컴퓨터용어사전은 ISO(국제표준어기구)2382조항을 기본으로 남북한 학자가 합의한 컴퓨터 용어 표제어 2500여개와 해설을 담고 있으며, 한·중·일 3개국어로 색인을 마련했다. 초기의 경우 컴퓨터 관련용어의 사용에 있어 남북한간 이질화가 심했으나, 다년간의 협의 끝에 공공 사전을 출간했다. 국어정보학회측은 2000년에 연변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말 문자의 정보화 문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언어는 상이한 체제 및 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이질화가 심화되어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학자들의 교류·협력에 있어 언어이질화의 해소가 중심적 주제가 되어왔다. 다른 학술교

23) 합의문 전문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산원이 발행한 「북한의 정보화 동향 분석」, 1997. pp. 155-161. 참조.

류와 마찬가지로 제3국의 관련 학술회의에서 주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서울대 이현복교수와 북한 혜산사범대 로길용교수는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폴란드 바르샤바대학에서 ‘남북한 언어비교연구’라는 주제로 남북한간 최초의 언어공동연구를 수행했다. 1993년에는 국제 고려학회주최로 남북한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학술회의’가 베이징(‘93.8.28-31)열렸으며, 1995년에는 ‘KOREAN 규범문제와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95.8.3-4)에서 남북학자들간에 한국어 언어규범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국립국어연구원과 북한국어사정위원회,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96.8.5-7, 장춘)에서는 향후 남북한이 맞춤법·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을 개정하더라도 현재의 차이를 확대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2. 종교분야

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 현재까지 종교분야에서의 남북한 주민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111건(867명)으로 빈도수에 있어 학술분야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계는 북한지역 동포들에 대해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대북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술분야에 이어 북한측과의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했다. 종교분야의 교류·협력도 제3국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북도 상당수 성사되었다. 이는 종교계의 경우 대북지원성 교류가 많고, 북한의 대외 이미지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순수 종교교류보다는 경제적 실익이 동반되는 종교계의 방문을 선호하고 있다.

남한의 개신교계는 남북 종교 교류·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기독교협의회(KNCC) 등 교단차원의 협의회들의 역할이 컸다. 1986년 6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개최된 '남북평화통일협의회'를 통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 대표단간의 접촉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1988년 11월 글리온에서의 2차회의이후 최근까지 양측은 모임을 연례화하고 있다. 1991년 9월에는곽선희 목사(소망교회)가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1992년에는 권호경 목사(KNCC 총무)가 방북했다. 1997년에는 김동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등이 방북(9.23)하여 남북교회간 교류 및 협력방안에 관하여 북한측과 논의했다. 1997년 9월에는 지덕(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등이 금강산교회 복구 등 협의 목적으로(북경, 9.25~26) 북한측과 접촉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종교계의 방북이 활기를 나타냈으며, 1998년에도 개신교의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북한과 종교교류를 실시했다. '98년의 경우 개신교를 중심으로 제3국 공동행사중심의 접촉위주에서 순수 종교교류 목적의 방북이 증가하였다. 1999년에도 김명기·은희곤 목사 등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대표단 6명이 방북(5.18~5.25),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평양에 제 3의 교회를 설립하는 방안 및 평양신학교 지원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부연회는 '99년 10월에도 방북하여 감리회 지원으로 운영중인 봉수국수공장을 방문하고 재북 기독교가족의 생사확인과 평양신학원 건립 등을 논의했다. 또한 99년 10월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한민족통일선교협의회 주봉택 목사 등이 방북, 이산가족 상봉과 평양산원 지원 등을 논의한데 이어 서부연회 대표단도 방북했다.

천주교계의 경우 1995년 5월에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초

칭으로 김상진 신부(천주교·성베네딕도수도원)의 방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92년1월 권호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의 방북 이후 3년 4개월만의 일이었다. 김신부는 김영환(대구가톨릭대학 의학부 총장)등 사제 3명과 함께 방북하여, 나진 선봉지역에 2백 병상 규모의 병원건립문제를 협의했다. 김상진 신부는 1997년에도 방북하여(5.28~30) 의료선교문제를 협의하고 나진병원 기공식에 참석했다. 1998년의 경우 종교분야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최창무 주교 등 위원 7명이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 평양 장충성당에서 북한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다.

불교계는 남북불교교류를 위해 1988년 11월 '남북불교도 교류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991년 10월 미국 L.A 관음사에서 개최된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에서 최초의 남북불교인들간의 접촉이 성사되었다. 1996년 4월에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으로 조계종 총무부장이 방북, 남북한 불교계 현안과 북한 수재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1998년 3월에는 남북한 불교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불교지도자들의 실무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양쪽은 98년 6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통일법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부처님 오신 날 남북한 불교도 공동발원문채택, 그리고 북한지역 사찰 현황 파악과 복원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회담에는 한국 조계종에서 총무원과 미주평불협회장,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99년 6월에는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을 받아 방북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차원에서 불교계 대표가 공식 방북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99년 10월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가맹교단인 대한

불교진각종 관계자들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초청에 의해 종단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다. 이들은 방북기간중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의 불교 사찰과 복지시설 방문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합동법회 개최를 개최하고, 복지시설 건립과 국제불교성직자연합창설, 21세기 고려대장경 공동번역사업 등을 제의해 긍정적인 회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00년 봄 베이징에서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를 갖기로 실무선에서 합의하였다.

천도교의 남북종교 교류·협력은 타 종단에 비해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1991년 10월 네팔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총회에서 남북한 천도교대표들 사이에 최초의 접촉이 이루어 졌으며, ‘93년 10월에는 오익제 교령(‘97년 10월 월북)이 북한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유미영 위원장과 만나 천도교교류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99년 8월 천도교는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천도교측과 ‘남북 천도교 지도자회담’을 갖고 동학혁명 전적지 남북공동조사와 남북한 천도교 공동사업 논의를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99.8.24~26). 대중교는 1994년 4월 북경에서 북한측과 접촉 개천절 공동행사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 4월 안호상 총전교 등이 방북하였으나 남북 종교교류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²⁴⁾ 그러나 북한측이 기념비적인 단군릉을 건설하는 등 최근 단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0년

24) 95년 4월 대중교의 안호상 총전교(초대 문교부장관)와 김선적 중무원장이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입국함으로써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에게는 사법조치가 취해졌다. 안총전교 일행은 북한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위원장 명의로 단군이 승천한 어천절(4월14일, 음력 3월15일)행사참석과 단군릉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방북신청을 통일원에 냈으나, 통일원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 아래 방북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이들에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되었다.

평양에서 남북공동 단군학술회의²⁵⁾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도교와 대중교의 종교교류는 과거와 달리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범종단차원에서는 1997년 북한측제의로 「남북종교지도자베이징회의」(97.5.30~31)가 개최되어 남북종교인의 협력강화, 식량지원 등이 논의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남북한과 일본 종교계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여('99.4.25~4.27)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베이징 종교인 평화모임'을 가졌다. 특히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활동을 촉구하는 '1999년 베이징선언문'이 발표되었다.

3. 문화·예술분야

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 현재까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남북한 주민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87건(702명)이다. 그 동안 문화·예술 분야는 북한측의 기피와, 공연 등의 경우 상당한 준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환동해 국제예술제'(1991, 일본), '통일예술제'(1992, 사할린)등 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해외동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1989년 이후 1998년 말까지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의 경우 왕래교류로서 남북국악인 교환공연인 1990년 평양의 「범민족통일음악회」와 서울의 「90년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등 왕래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정부당국의 합의에 의한 것

25) 99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고려대 김정배 총장은 19일 "방북기간중 북의 사회과학원과 2000년 개천절에 남북의 학자들이 단군에 관한 학술교류 모임을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9.11.19. 따라서 이 행사가 성사될 경우 이와 관련된 천도교와 대중교의 종교교류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으로 모두 상징성이 큰 공연들이었다. 그러나 이후 '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까지 남북왕래교류형태의 문화·예술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대체로 제3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남한 인사들의 개별적 방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이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악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85년 고향방문예술단 서울·평양공연, '90년 '범민족통일 음악회' 평양공연,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서울공연, '98년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평양공연과 한겨레통일 문화재단이 '윤이상 통일음악회'에 참가등 왕래교류형태의 예술공연이 많았다. 특히 리틀엔젤스예술단의 북한공연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90년의 왕래공연 이후 8년만에 성사된 것으로 순수 민간차원의 공연으로서는 분단이후 최초라는 의미를 지녔다. 한국문화재단(이사장 박보희)소속 리틀엔젤스예술단 66명은 98년 5월 11일간 평양에서 세 차례의 전통예술공연을 했다. 1999년에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동생 로저 클린턴과 남북한 인기가수가 출연한 가운데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에서 '2000년 평화친선 음악회'('99.12.5)가 평양에서 열렸다. SBS는 코래컴과 북한 아·태평화위가 개최한 공연 실황을 녹화, 방영('99.12.10)했다. 가수인 로저 클린턴 콘서트 형식으로 성사된 공연에 남쪽에서 패티 김, 태진아, 설운도, 잭스키스, 핑클이 참가했다.²⁶⁾ 또한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한 제1회민족통일음악회가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려 남북의 가수들의 합동공연이 있었다.('99.12.20) 공연

26) 행사 주최측은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산 '닉스(Nix)' 청바지 3만벌과 휴대용 카세트 라디오 헤드폰 각 5천세트를 제공하기로 북한측과 협의했으며, 북한측은 공연장 대여료 등으로 6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은 1부 남측, 2부 북측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남측에서는 사회자인 차인태 경기대 교수와 가수 현철, 신형원, 안치환, 김종환, 그리고 영화배우 오정해 등이 참가했다. 북한측은 인민배우 주창혁과 로용권, 김순희, 김숙녀, 박순복 등 공훈배우 들이 출연했다. 이 공연은 생중계방송은 무산됨에 따라 녹화로 남한에 방영되었으며, 2000년 금강산과 서울에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99년 12월 현재 기획사인 SN21엔터프라이즈의 남북대중음악회,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의 종합공연 형식의 통일음악회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분야의 경우 내용면에서 과거 보다 발전된 교류·협력이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화·연극분야의 경우 1990년 뉴욕의 「남북영화제」에서 남북영화인들간의 최초의 교류가 있었으며, 이후 남한의 영화사들이 미국의 교포영화인들을 통해 남북 영화교류를 시도해왔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 정부의 햇볕정책에 자극받아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영화를 수입하여 방영했다. SBS는 방송사상 최초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방영했으며('98년 9월1일), KBS도 '98년 9월 17일부터 10부작 '임격정'을 방영했다. MBC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북한에서 제작된 흥행작 '불가사리'의 수입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낮은 시청률과 판권시비 및 북한영화의 신선감 저하 등 대체로 경쟁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방영을 확대하지는 않았다.²⁷⁾ 연극분야는 '91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 전통연극에 관한

27) KBS가 방영한 임격정의 경우 평균 13-14%의 시청률로 남한의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격정'은 독립프로덕션 IMS가 북한 목란비디오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한뒤 KBS에 수입을 알선했으나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사·아태평화위원회와 정식 판권계약을 했다고 주장해 방영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불가사리」도 북한영화수입사 SN21 엔터프라이즈가 판권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구입, MBC측에 방영권을 팔고 문화부가 수입추천까지 했으나 제작자인 신상욱 감독이 국제저작권법과 국내 관행에 비취 자신에게

심포지움'에서 최초의 남북교류가 있었으나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사진분야는 연길에서 열린 '94년 9월 '남·북한·중국사진전'과 '97년 7월의 '97 국제 한민족 사진세미나 및 사진전'에서의 교류 등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이 있었다. 특히 '98년 남북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진집 '백두에서 한라까지-렌즈로 본 조국'이 발간되었으며, 서울에서 전시회를 가졌다(5.29-6.11). 한국사진학회와 북한 조선사진작가동맹의 2년여에 걸친 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한 작가 20여명, 북한작가 46명이 참여했다. 양측 관계자들은 책의 출판을 위해 두차례 북경회담을 가졌으며, 세차례에 걸쳐 교정지를 교환했다.

미술분야는 '91년 5월 베이징의 '남북코리아 서화전', '93년 오사카의 '코리아통일미술전', '97년 10월 동경의 「남북평화미술전」 등 제3국에서의 남북간의 접촉이 많았다. 1998년 이후 남북교역차원에서 북한미술품의 반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99년에는 등 미술계 인사 11명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방북('99.8.31~9.7)하여 금강산 묘향산 평양 등 북한산하를 방문했다. 이들의 방북은 원로·중견 문화·예술계 인사가 분단 후 처음으로 대거 평양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 동안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한 풍경이 일부 소개되기는 했으나, 정부 승인하에 대규모 화가들이 방북한 것은 처음이었다.

1997년 이후 유적 및 자연경관 답사와 관련된 문화교류도 시작되었다. 1997년 9월 중앙일보측이 북한 문화유적답사를 목적으로 방북했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는 북한 문화유적 답사를 위한 협력사업자로 지정('97.12.11)되어 북한지역 유적 공동조사와 관련, 언론보도

관권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등을 포함한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일보는 97년 3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문화협력사업자이다. 또한 문화방송이 방송사 최초로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등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사업 추진목적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98.3.13).

4. 언론·출판분야

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 현재까지 언론·출판 분야에서의 남북한 주민접촉은 53건(146명)이 성사되었다. 언론·출판분야의 특성상 북한실상의 공개, 정보의 교류와 유입 등을 꺼리는 북한측이 체제 유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97년 이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론분야 교류·협력의 경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동행취재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가 교류를 희망했고, 언론사들도 북한지역 취재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점차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 내용도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방송분야의 경우 1997년에 비로서 문화방송의 '금강산 자연다큐멘터리 제작' 등 사업성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 졌다. 97년 10월 문화방송 관계자들이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초청으로 방북하여 평양을 비롯해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등을 둘러보고 북한당국과 자연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에 대해 사전협의를 벌였다. 특히 1997년 KBS는 남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아 북한의 생활상과 백두산 자연을 촬영한 다큐멘

터리를 제작·방영했다.(‘97.9.14) KBS가 기획하고, 북한지역 촬영은 조선족 카메라맨이 실시함으로써, 남북한과 조선족 3자간의 협조가 이루어 졌다. 1999년 9월 평양에서 거행된 통일농구단의 시합이 녹화 또는 생중계방식으로 남한에 방영되었다는 점에서 방송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비록 북한이 PAL방식으로 촬영한 화면을 NTSC방식으로 전환해 방송했으나 방송교류가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SBS도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에서 개최된 '2000년 평화친선 음악회'(‘99.12.5) 공연 실황을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방영(‘99.12.10)했다. 또한 북한농구단의 서울경기(99.12.22-15)에 북한측 방송요원들이 합류한바 있다. 정부가 북한 위성 TV방송의 국내 시청을 허용한다고 발표(‘99.10.22)한 것도 방송교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²⁸⁾

1998년에는 신문사들의 방북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동아·중앙·한겨레 등 최초로 국내 3개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이 실현되는 등 언론교류 협의 및 북한내 문화유적 답사·취재 목적 등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의 문화유적 답사를 목적으로 방북하였으며, 경향신문도 대북문화정보화사업 목적으로 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을 받아 한민족문화네트워크의 구성 협의차 방북하였다. 중앙일보도 남북언론교류 및 문화교류 협의차 방북하였으며, 동아일보의 언론교류협의 및 문화유적 답사·취재협의를 위한 방

28) 이에 따라 언론사는 북한 위성TV 방송을 독자적으로 수신,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접시 안테나와 컨버터를 설치하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과 북한자료센터 등에 북한 방송 수신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북한 TV 방송 내용을 녹화해 이적 목적을 갖고 유포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 받으며, 언론사들은 정부가 만든 '언론사내북한방송 수신 및 활용지침'에 따라 북한방송 활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북한은 난시청해소와 체제 선전 등 대외홍보를 위해 99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을 이용해 조선 중앙TV의 위성방송을 시작했다.

북도 성사되었다. 또한 ‘스포츠아트’의 북한내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 목적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출판분야에서의 남북교류는 부진했으며, 특히 비정치적 출판물에 대한 수요 등 잠재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정식계약에 의한 남북출판 교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태위원회측은 98년 9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측에 의학과과학기술서적 등의 전문서적을 보내주면 북한 저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도서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출판협동조합, 경인여자대학 등은 ‘남북한 도서교류 캠페인 추진본부’를 결성하여 과학 기술 분야 등의 전문서적을 수집한바 있다. 향후 역사·문화분야 등에서 교류·협력가능성은 크다고 할수 있다.

5. 체육분야

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 현재까지 체육분야에서의 남북한 주민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체육 58건(518명)이다. 체육분야의 남북왕래교류로는 「남북통일축구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²⁹⁾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구성 등 1990년대 초반 왕래교류를 비롯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초기의 추세는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기인한 면이 있으며, 따라서 순수 민간 체육교류라기 보다는 정부주도에 의해 성사된 면이 있었다. 그러나 1991년 8월 북한유도선수의 망명으로 북한측은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에 소극적,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해왔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을 이

29) 정부는 1991년 3월 남북탁구단일팀구성 및 대회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여 경비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이는 ‘남북교류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한 남북간 최초의 협력사업이었다.

유로 국제적인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체육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99년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는 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와 관련, 평양에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고, 현대농구단의 방북 및 북한 선수단의 서울 경기가 실현되었다. 이와 같은 체육교류는 현대와 북한측간에 정례화 및 향후 확대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남북 체육교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3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총회'에 KOC 명예총무 등이 참석한바 있으나 대체로 방북을 통한 체육인 교류는 부진했다. 제3국 개최 체육행사를 통한 남북체육인간의 접촉은 1995년 9월의 '세계군인체육대회', 1996년 8월의 '윌리엄존스배국제농구대회'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최근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1997년의 경우 대한산악연맹 관계자들이 베이징에서 북한 등산협회 암벽등반교육 및 대회를 참관(7.19~28)했으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영국 맨체스터, 97.4.24~5.5)에서 남북한 여자탁구 선수단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1998년 9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와 12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남북 체육인간의 접촉이 이루어 졌다.

1999년의 체육교류는 '90년 이후 처음으로 왕래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내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현대의 남녀농구단이 방북('99.9.28~29)하여 평양에서 남북친선농구대회인 '통일농구경기대회'를 가졌으며, 이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북한측 농구단이 서울에서 경기를 가졌다.('99.12.22-25)³⁰⁾ 북한측 선수단에는 평양교예단이 합류

30) 북측 방문단은 송호경 아·태평화위부위원장을 비롯, 관계자 8명, 우리(남자)-회오리(여자) 농구선수단 38명, 교예공연단 14명, TV중계요원 2명등 모두 6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북 혼합팀 경기와 남·북 통일농구대회를 가졌다. 북한측 인사의 서울방문은 '93년 서울에서 열린 두만강개발계획

하여, 경기 막간에 공연을 가졌다. 남북이 상호방문형태의 체육교류를 가진 것은 지난 90년 10월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를 개최한 후 처음으로 체육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은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농구 외에도 축구, 배구, 탁구 등 체육교류종목 수를 확대해 정례적인 남북 친선 교환경기를 개최키로 했다. 통일농구대회는 방북일변도로 추진되던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양방교류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평양교예단 공연 및 남북한간의 중계 등 체육교류가 다른 사회문화교류와 연계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남북왕래 체육교류의 성사에 이어 남북한간을 연계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체육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³¹⁾ 체육계간의 교류는 아니었으나 민주노총이 평양에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99.8.16)하였는바, 분단이후 남북 노동자간의 첫 축구대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위원장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99.11.15~18)하여 2002년월드컵축구 북한 분산개최와 남북축구 교환경기 및 다이내스티컵 국제대회를 대체할 극동 4개국대회 창설 등 주요 관심사를 논의했다. 월드컵의 경우 한일공동개최 이유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TRADP) 자원·환경분야 전문가 회의에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과장이 참가한 이후 처음이다.

31) '99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 랠리는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 서울, 평창과 북한의 금강산 지역에서 열리게 되어있었으나,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2000년 5월로 연기되었다. 기획사인 ㈜우인방커뮤니케이션과 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5년동안 금강산 랠리를 개최키로 북한의 조선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합의했으며, 통일부는 99년 11월 이를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으로 승인했다. 이 대회에는 국내외 해외팀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치러지게 되며, 3시간 시차를 두고 중계된다. 남측 사업자는 북측 사업자인 조선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미화 100만달러를 대가로 지불할 예정이다.

라는 점이고, 북한측에서도 경기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의 체육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통일농구대회의 경우 남북 체육교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와 북한측은 통일농구를 6개월간격으로 정기전 형식으로 치르는데 합의한데 이어 타종목으로 체육교류를 확대키로 합의한 상태이다. 또 양측은 농구발전을 위해 각종 기술정보와 심판 및 지도자연수에서도 남북한이 상호협조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농구대회는 현대그룹을 통한 순수 민간차원의 교류로 시작됐지만 대한농구협회 등 체육관련단체도 자연스럽게 교류·협력과정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관광분야

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 현재까지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한 관광분야에서의 남북한 주민접촉 성사 건수는 47건(145명)이다. 남북한의 관광교류는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기까지는 관광을 위한 실무차원의 접촉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접촉은 민간분야간의 자율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정부차원의 제의와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었으며,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남북한간의 관광협력이 최초로 시도된 것은 1982년 2월로 남한정부가 북한측에 설악산과 금강산을 자유관광지역으로 조성하자고 제의한 것이었다. 이후 1989년 1월 현대의 정주영회장이 방북하여 북한의 대성은행과 '금강산공동개발계획'에 대한 잠정합의를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

정된 것을 계기로 1990년 10월에 당시 교통부는 ‘남북관광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금강산 및 비무장지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1991년 3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 남북한 대표가 함께 참가한바 있으며, 1991년 7월 남북 고위급회담시 민간기업차원에서 외국관광객과 해외동포의 남북한 동시방문을 위한 관광상품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2월 남한의 민간여행사들이 남북한 간 관광상품의 공동개발과 외국인의 북한송출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에는 북한은 평양에 본사를 둔 재미교포합작회사인 ‘금강산국제관광회사’를 통해 92년 5월 1일을 기해 남한주민에 대한 백두산과 금강산 지역관광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통부는 1992년 4월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에 따라 단체관광을 우선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7년 말까지 관광교류·협력에 관한 조치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때까지는 순수 관광목적상 남북한 주민의 왕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³²⁾ 다만 1997년 이후 언론방송계가 방북하여 관광자원의 성격을 띤 북한의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답사하기 시작했다.

1998년의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추세속에서 6월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방북하여 북한의 ‘조선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유람선을 통한 금강산관광에 합의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었다. 1998년 11월 18일 첫 유람선이 출항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광이 시작되었다. 1998년의 현대금강호 및 현대봉래호에 이어, 1999년 5월에는 현대풍악호가 취항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성사는 대규모 일반주민들의 관광목적상 방북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

32) 김영윤,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민족 통일연구원, 1997. pp. 50-53.

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는 1999년 10월 북한측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30년 독점사용권을 보장받았으며, 향후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1999년 11월 18일로 금강산관광사업은 1주년을 맞았으며, 그동안 14만명이 넘는 남한사람들이 금강산을 관광했다. 이는 냉전체제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천문학적 숫자의 주민방북이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측의 기피로 당국간 대화가 부진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으로 추진된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관광객 억류사건으로 45일간 관광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과거와 달리 사태가 비교적 단기간에 매듭지어졌다. 남한의 경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경우 초래될 정치적 타격을 원치 않았고, 특히 북한의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의 수익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4> 금강산관광객 현황

99년 11월 현재

연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사
1998	29(14,228)	26(12,812)	-(9)	-	-	23(10,554)
1999	234(149,753)	231(149,336)	-(88)	6(1,736)	-	227(135,577)
계	263(163,981)	257(162,148)	-(97)	6(1,736)	-	250(146,131)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및 인도적사업동향」, 11월호, 1999.

V.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

분단이후 현재까지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1998년 대북포용정책의 구사와 금강산관광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한계는 스스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냉전체제하에서 교류·협력은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냉전체제에 의해 형성된 주변적인 조건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받았다. 특히 정치적인 요인들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이거나,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이를 빌미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왔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상호체제선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점은 그 동안 남북관계가 체제경쟁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용했으며 남한의 반공주의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경직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체제가 전반적으로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될때까지 통일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문화정책의 중심은 반공정책이었다. 이는 북한과 무력을 동반하는 적대적 긴장관계에 직면한 한국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의 개방적 가능성도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제약은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사회문화정책을 유지한 북한의 경우 극명하게 나타났

다. 북한의 경우 사회문화영역자체가 체제의 유지와 순응적 사회주의 인간형의 형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문화분야는 사회통제와 사회주의문화의 타율적 전달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자율적인 사회문화요소들의 기능이 본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제한되었고, 왜곡되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제의들은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성사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류·협력의 형태도 일시적이고 단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문화 교류·협력 그 자체보다 정치적인 선전성을 우선시한 측면이 강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사회문화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민간 교류·협력의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 입장과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류·협력사안들은 성사되기 어려웠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비정치적 학술분야와 인도적 성격이 강한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냉전체제에 종속됨으로써 주변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³³⁾ 교류·협력이 취소

33) 전체적으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김일성의 사망 등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으며,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례로 1994년 일본에서 열기로 한 「코리아 통일미술전 및 예술축전」과 민예총이 북한민예총과 함께 서울에서 열기로 한 「코리아 통일미술전」은 김일성사망에 따라, 북한측이 이를 연기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한 1990년의 「제 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북한측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이 문제가 되었으며, 1992년 「노부모고향방문

또는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셋째, 왕래교류보다는 제3국에서의 접촉이 많았다.³⁴⁾ 성사된 남북한 교류·협력이 대부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제3국인 및 교포들의 중개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주체적으로 주최하는 경우가 적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도 제 3국에서 개최되는 관련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국의 베이징과 조선족 교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연변지역에서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이 지역이 북한지역과 근접해있어 북한측의 참석이 용이하고, 긴밀한 북·중관계 등으로 북측인사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지역에 한국학 및 북한관련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고, 북한에 해박하거나 인적인 연고가 있는 조선족들이 중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98년 이전까지 사회문화 교류·협력에서 방북 및 왕래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넷째, 대부분의 교류가 협력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민접촉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91년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몇 건의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97년말까지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이 전무했다는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류·협력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전된 내용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민접촉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남북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단,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인모의 송환과 포커스렌즈훈련이라는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34) 1995년 주민접촉건수는 494건이었으나 방북은 53건이었으나, 잠수함사건이 있는 1996년의 경우도 주민접촉 465건에 방북은 28건에 그쳤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남한주민의 방북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1993년의 2건(6명) 이후 1999년 12월 북한 농구선수단의 서울방문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북한측이 공세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측의 제의나 요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응하는 수동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특징은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1998년을 전후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로 1997년 전반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인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8년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유지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상징화되는 남북한 교류협력도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대북포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비로소 실질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포용정책 실시 이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의 경우 사회·문화부문에서 남북한 주민접촉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1999년에는 수치상으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민노총 대표단의 평양 친선축구대회, 현대농구단과 북한 농구선수단의 평양과 서울 상호방문을 통한 통일농구대회, 그리고 남한 대중가수들의 평양공연 등 과거에 비해 질적인 측

면에서 진전된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고, 유사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과 질에 있어서 확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3국에서의 접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북을 통한 교류·협력 추세로의 전환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한주민의 방북이 대폭 증가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99년 10월말 까지 7,836명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이는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수치로 1989년부터 1998년 2월까지의 방북자(2,582명)의 3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1998년 사회문화분야의 방북은 238명으로 97년에 비해 약 9배가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방문 공연 및 체육경기가 성사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왕래교류가 이루어 졌다. 특히 1999년에는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서의 공연과 시합 등 상징성이 큰 대형 교류·협력이 남북한 왕래형태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와 이산가족상봉의 증가로 제한된 주민들에게 허용되던 남북 주민접촉 및 방북이 일반주민들에게 확대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수시방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한 주민들의 관광목적상 방북이 무제한 가능해졌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넷째,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의 대부분이 1998년 이후에 이루어 지는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북포용정책의 구사와 이에 따른 지원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북한의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 획득과 대외홍보 및 통일전선 전술의 구사라는 다목적 실익추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³⁵⁾

다섯째, 최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 달리 정치·군사적 차

원의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서해에서의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며, 금강산 관광객 역류사건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다.³⁶⁾

그러나 이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자율적 토대형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주로 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지 않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제도권 혹은 정부와 입장이 다른 민간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북한 주민접촉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허가없이 북한과의 공동 행사에 참가한 민간단체의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³⁷⁾ 또한 99년 8월 평양에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했던 민주노

- 35) 예를 들어 민노총 대표단의 방북과 친선경기는 남북노동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북한측이 대외홍보 및 선전을 의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민노총 대표단은 방북이후의 행적등으로 남한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통일 농구대회의 경우 북한에게 막대한 실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2000년통일음악회'의 경우도 북한측에 대가가 지불됨과 아울러 CNN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등 북한측으로는 대외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 36) 북한은 1999년 6월 서해교전사태 이후 남한 관계자 방북을 일반적으로 중단시켰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측은 99년 7월 방북 예정이던 국제육수수재단 김순권박사의 방북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 대표7인의 방북에 대해 방북 연기를 요청하면서 '일시 난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관계자들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관하는 여성대표 7인 방북에 대해서도 방북 일정을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현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북한의 과거 태도와는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37) 정부는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의 이용가능성을 들어 고 문익환 목사 추모행사 개최를 위해 99년 5월초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과 예비접촉을 가질 계획이던 전국연합 공동의장에 대해 북한 주민접촉을 불허했다. 결국 99년 6월 1일 중국 용정에서 열린 '문익환 목사회고를 위한 남·북·해외 동포 공동모임'에 정부의 불허 조치에 불복하고 참가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참가자 4명중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천도교중앙총부의 경우 북한측으로부터 99년 10월3일 단군절행사의 참가 초청을 받았으나, 당국의 만류로 참가를 포기했다.

총관계자들의 방북행적에 대해 귀국이후 검찰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송두율 교수나 고 윤이상 선생 미망인의 남한 방문이 당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보안법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분단 및 냉전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냉전구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출범과 아울러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1998년을 전후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한층 진전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하는 동시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VI.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1.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에 비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의 종속변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교류·협력은 남북한 당국자들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통제받았으며,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사실상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는 이미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 분단상황하에 놓여있으며, 냉전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단계의 중요한 과제는 이와 같은 유리한 주변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와 남한정부의 대북포용정책구사로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실리추구차원에서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행사성 남북왕래교류에 선별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은 남북교류·협력의 증가추세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방기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통일에 앞서 남북한의 민족간 통일과 사회통합의 기초를 형성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주민간 이질화의 완화 및 해소는 현단계에 있어 남북한 냉전 구조해체를 위한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통일이 후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이질화의 요소가 극대화된 현재적 상태에서의 결합으로는 여러 가지 난관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과정적·미래적 의미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통한 이질화의 극복과 화해·협력의 기틀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서 안정적 추진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남북관계변화 등 외적 요인들에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 교류·협력분야를 제한했던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북포용정책 실시이후 남한정부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으며, 민간교류에 대해서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을 주축으로 하는 자율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토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적 변수가 상존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1999년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공고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체제경쟁의 요소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측의 체제약화과정은 남한측에게 자신감 있고, 융통성있는 사회문화교류를 시도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또한 남한사회에 긍정적인 시민사회적 요소가 보다 확장되었다는 점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양보를 통해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남북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교류의 진전에 대해서 놀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다. 특히 남북왕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농구대회나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북한이 정치적 선전목적으로 허용한 일시적 이벤트로 그 의미를 격하하는 시각이 있다. 지구촌 차원의 냉전구조가 해체된 지금에도 남북한은 냉전체제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많은 영역에서 냉전문화와 냉전의식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남북한 주민들간의 거리는 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체육선수들과 문화계인사들이 합동경기와 공연을 하고, 이를 남북한 주민들이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주민들의 거리감해소에 있어 계산하기 어려운 파급효과가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은 경험의 의미를 넘어 남한 일반주민들의 대규모 수시 방북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북 인적교류의 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에게게서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

다.³⁸⁾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에 자극이 된다는 거시적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비판은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측은 경제적 이익 및 대외이미지 개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실리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모아져 있다. 또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얻어진 외화를 군사력강화에 쓰거나 지배층의 이익추구에만 쓸것이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문제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근본적 변화없이 외부의 원조나 얼마간의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생존하거나 강화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개방을 하거나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응할수록 북한체제가 외부 및 남한체제와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를 포함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대화에 있어서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초기의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문화의 핵심적 요소인 민간분야가 자율적인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경우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던 과거와 달리

38) 금강산관광객의 경우 관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통일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교류에 기여한데 대해서 금강산관광객의 경우 71.92%가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관광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53.5%만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금강산관광사업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기여 여부”, “금강산관광사업이 서해교전사태의 진정에 대한 도움여부” 등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택, “금강산 관광의 북한주민의식 변화에 대한 영향”,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경협」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9)

민간이 주축이 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에 있는바,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족적 상징성과 남북한의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가지는 의미를 감안, 보다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사회문화·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남북 노동자축구대회 또는 고 문익환 추모사업, 통일음악회와 통일농구대회 등 경제적 실익이 동반되거나, 대외이미지 개선 및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민간교류에 응하지 않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이되는 중·소규모 남북 경협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우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이 가능한 중점분야를 집중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점차 교류·협력을 연계·발전시키는 방식이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이나, 조직이 큰 민간단체나 특정분야의 민간단체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독점하는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해 실리추구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응하고 있는바,³⁹⁾ 북한의 자세변화추이를 주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39) 북한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해 이른바 '선지원 후교류'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측의 요구수준도 점점 높아져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가. 법·제도의 정비

그 동안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수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과거 소수 선별적 인원의 비정기적 남북접촉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와 같은 수시 방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하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⁴⁰⁾ 따라서 수시방북체제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류·협력의 확대추세가 유지될 경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방북자들에 대한 포괄적 신변안전보장 문제이다. 또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빈도수가 급증함으로써 체제간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제반문제들이 남북 주민간의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남한주민들의 방북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북한지역에서 남한주민들이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⁴¹⁾ 이와 같은

40) 1999년 1월 제2건국위는 공청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신축적으로 적용, 북측인사들과의 접촉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고 북한 방문 기회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한 '남북한 화해환경 조성의 방향과 추진전략' 프로그램을 제시한바 있다.

41)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동·서독간 교류의 경우 상당수의 서독주민들이 동독지역에서 민·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1965년의 경우 총 330명의 서독주민들이 동독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중 242명은 베를린에서, 75명 큰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통과도로에서, 나머지 23명은 동독에서 체포되었다. 이는 공식적 통계가 아니며, 현장을 목격한 서독방문객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Reiserverkehr in Deutschland", Deutscher Bundestag(5.Wahlperiode): Deutsche V/821 (8. Juli 1966), p. 3.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26-27. 재인용.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를 통한 제도화의 완성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유도해 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류·협력체제와 상충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간의 냉전적 관계에 기초하여 성립되었으며, 제한된 주민접촉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직된 형태로 유지되면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남북한간의 대규모 인적교류상황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접촉승인제도와 방북절차 간소화, 북한방문기간연장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방식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주민간에 수시적, 반복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별 결과보고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방북 교육체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강산관광객 역류사태로 방북교육체제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불특정 다수의 방북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과거의 방북교육체제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북자와 북한주민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기존 교육을 보완하여 북한방문시 행동수칙, 예절교육, 대화 및 접촉요령, 응급·돌발상태 대응요령 등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목표,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주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통해 일반주민의 수시 방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북안내교육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일교육과 연계시키는 종합적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방북교육의 목표는 방북시 행동요령 및 문제발생시 대응요령 등 실무차원과 아울러 통일교육의 측면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과 같이 교육대상이 불특정다수로 피교육자의 구성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장소 및 시간의 다양화, 피교육자의 편의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급자위주'의 방북안내교육에서 탈피 '수요자위주'로의 인식전환과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통일교육차원에서 방북자 안내교육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기관과 효과적 프로그램개발능력이 있는 기관들이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²⁾

나. 물적 기반의 확충

최근 확대추세에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물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은 경우 사업성이 보장되면 특별한 지원책이 없어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경제성 보다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가 지니는 공공성의 의미를 감안 교류·협력이 안정적으

42) 서독의 경우 정치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동독지역방문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행자들을 위해 통일관련 기본정보와 여행절차 및 유의사항들을 명시한 다양한 소책자들을 발간·배포했다. 김학성, 「금강산관광객 방북 안내교육 개선방안」, 통일교육원 세미나 발표문, 1999.6. 참조.

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적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경협에 국한되어 집행되어왔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서 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을 다양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0년 8월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2항은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그리고 5항은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왕래 자금지원, 문화, 학술, 체육분야 협력사업의 자금지원, 민족공동체 회복사업지원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대부분이 정부출연금이며, 일부는 민간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도 조성되었다. 그러나 유사시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및 채권발행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금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후 ‘91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지원 17건 3,364억 6,500만원과 한국수출입은행 위탁 수수료 18억 7,600만원 등 총 3,383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999년 12월 현재 3379억원이 남아있다.

<표5>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실적

(단위: 억원)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조성액	252	451	448	494	2,547	1,185	782	403	200	6,762
집행액	25	8	3	3	1,826	106	193	876	343	3,383
순조성액(누계)	227	670	1,115	1,606	2,327	3,406	3,995	3,522	3,379	3,379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및 인도적사업동향」, 11월호, 1999.

초기의 경우 체육분야 국제대회 단일팀 출전지원과 쌀 직교역의 손실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에 지원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지원된바가 없었다.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된 1995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쌀 무상지원 및 국제기구의 대북식량지원 등에 사용되어왔다.

<표6>주요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내 역	금 액
'91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쌀 직교역 손실보조(친지무역)	○164 ○786 ○1,268
'92	○8.15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준비금	○551
'95	○대북 쌀 15만톤지원	○182,404
'96	○대북기상장비지원(WMO) ○유엔기구 제 2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대북경수로사업 사전용역비 지원(KEDO)	○40 ○2,435 ○4,882
'97	○유엔기구 제 3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UNDP 등) ○대북 탈수방지약공장복구 지원(UNICEF)	○18,815 ○304
'98	○대북 경수로 초기사업비 대출 ○유엔기구 제 4차 대북지원사업 참여 ○남북공동사전전 소용경비 일부지원 ○이산가족통합센터 설치운영비	○67,523 ○14,108 ○30 ○13
'99.11	○이산가족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이월분 집행 ○한직을 통한 대북 비료 5만톤 지원(민간참여분) ○대북비료 10만톤 지원(민간모금분제외)	○421 ○15,991 ○17,917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및 인도적사업동향」, 11월호, 1999.

따라서 대부분의 협력기금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과 경험에 관련 되어 집행되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99년 11월말 현재 '91년 세계

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구성지원(1억 6천4백만원) 및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지원(7억 8천6백만원)과 '92년 「8.1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 사업 준비금」(5억 5천백만원), '98년 남북공동사진전경비(3천만원),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설치·운영비(천삼백만원) 등에 대해 약 15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중 민간분야의 주도로 사업이 신청되고 이에 대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은 '98년 한국사진학회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남북협력기금이 매우 제한된 분야에만 국한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분야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을 다양화·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 예술, 학술, 체육분야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보다 융통성 있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사업별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며, 철저한 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정부주도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다각적 이용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큰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유리한 반면,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군소 민간단체의 경우 그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주도의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민간주도의 통일기금이 형성될 경우, 정부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에 비해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특정 민간단

체가 주관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적 권위를 가진 민간단체 협의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기금의 운용에 있어 철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⁴³⁾

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및 상호보완적 관계설정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문화분야의 특성상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민간분야의 자율적 교류·협력이 정착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분야의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와 아울러 당국대화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냉전구도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는 상당기간동안 통일문제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배제해 왔으며,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정부차원의 통일정책의 구사와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운동은 모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두 차원간의 배타적 관계설정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설정은 남북한의 궁극적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향후 통일문제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여하는 NGOs의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와 NGOs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⁴⁴⁾ 정부는 NGO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위에

43) 조한범,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46-50.

44) 조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pp. 20-24. 이장희,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9월호,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p. 34.

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NGOs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NGOs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및 관주도형 NGOs 활동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NGOs 차원에서도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활동을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야한다. 정부에 대해 일방적 비판만을 하거나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된 활동으로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정부와 NGOs간 역할을 분담하고, 다각적 협조체제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NGOs 참여 허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간 Task Force를 구성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일관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민간의 교류·협력 확대가 남북관계개선의 시금석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에 입각, 정경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가 점차 당국대화와 연계되도록 하는 점진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제반 협의를 위해 당국자간 접촉확대 등 남북관계개선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대표성있는 민간주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간교류와 당국대화가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경분리원칙의 준수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정부의 조정기능을 일정정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대규모 교류·협력에 대비, 남북간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바, 남북당국간 3통협정(통행·통신·통상)과 포괄적 신변안전보장 협정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당국간의 합의에 의한 제도화가 미약한 상태에서 돌발사태 발생시 민간주체가 독자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 차원에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시 당국자 차원의 접촉을 통해 정상적인 문제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민간과 북한간의 임의적 분쟁해결에 대해 엄격히 기준을 마련하여, 북한측에 당국자간의 대화 및 이를 통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분야에 있어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이 점차 확산될 것인바, 민간분야의 교류·협력활성화 및 창구다원화는 동시에 교류·협력에 대한 과당경쟁과 과열, 그리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⁴⁵⁾ 따라서 민간의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정보교환 및 공동협력사업의 실시, 그리고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를 구성, 정부와 효율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부문별로 통일관련협의체구성이 다양하게 진행되

45) 1998년 6월 재미동포 이광덕 목사와 10월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이 간첩혐의로 북한에서 추방되었다. 연변과기대에 따르면 북한은 김진경총장의 추방사유로 자유주의 이념전파, 중국식 개혁개방유도, 기독교전파 등을 들었다. 그러나 또하나의 이유중의 하나는 남북 교류의 과열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98년말과 99년초에 활발했던 기업과 언론 민간단체의 방북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뒷돈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초청 대가로 요구하는 대가는 수만달러에서부터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초청장을 받고도 비자가 나오지 못해 방북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대개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 1999. p. 241.

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고, '민화협'을 구심체로 만들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경우 민화협이 민간분야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운영이 필수적 요소이며,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민간분야는 각기 전문성과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민간의 각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교류·협력시 국제 NGOs와의 연대는 북한측으로 부터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대북사업의 성사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⁴⁶⁾

라.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운용자산의 수조원대에 이르는 NGOs가 있을 정도로 민간운동의 물질 기반이 튼튼한 서구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기부문화가 일반화된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의 경우 대다수의 NGOs는 재정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운동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분야의 민간단체도 이와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기부문화의 발달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나 정부의 지원을 다각화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46) 중국 및 러시아 등지의 탈북자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끌면서 많은 국제 NGOs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8년 9월에는 탈북자를 돕기 위한 전문 NGOs가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출범했다. 일본의 인권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탈북자돕기 순수 민간단체인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이 도쿄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1999년에는 서울에서 NGOs국제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행사에는 북한 및 통일관련 주제들도 포함되었다. NGOs국제대회는 지난 1992년 리우환경회의,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등이 열렸고 1999년 서울대회는 여덟 번째다.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NGOs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개발 NGOs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참조, 민간분야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정적 지원시 응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⁴⁷⁾ NGOs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크게 '재정협력방식(Co-financing)'과 '위임 또는 하청계약방식(Sub-contracts)'으로 나뉘어 진다. '재정협력방식'은 NGOs가 기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NGOs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위임방식'은 정부가 기획 및 재정을 책임지고 NGOs는 대리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다.⁴⁸⁾ Matching grants는 '재정협력방식'의 전형적인 형태로 NGOs가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위임방식' 또는 '하청계약방식(Sub-contracts)'은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NGOs를 정부의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사업을 일임하는 방식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NGOs의 취약한 물질 기반은 중요한 한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NGOs의 대다수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정문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방식을 응용하여 NGOs의 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효과

47) 조한범,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8.)

48) 김채형, 「OECD회원국의 NGO활동」, pp. 30-35. 김혜경, 「개발NGO의 현황과 발전방안」,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pp. 126-129. 참조

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어려울 경우 NGOs를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하청계약방식'(sub-contracts)은 NGOs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응용을 통해서 소규모에 그치는 NGOs 사업의 '규모의 문제'와 정부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니는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NGOs의 규모와 활동에 있어서 편차가 크고, 정부의 일방적 지원의 경우 NGOs의 대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협력방식'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NGOs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NGOs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NGOs에 대한 matching grants 방식의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⁴⁹⁾ 이상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특성과 NGOs의 성격 및 사업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재정협력방식'과 '위임방식'을 적절히 안배하는 재정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의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NGOs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은 실질적 지원의 의미를 지닌다. NGOs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료와 통신료지출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 및 전기, 상하수도 요금의 경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들 단체들에 대해 대

49) 민족통일연구원, "제1차 KINU-통일관련 민간단체 집중워크샵", 「1997년도 집중워크샵 결과보고서」, 1997. 강문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8년 하반기 정책집담회 주제발표논문, 1998. 10. 13. 제성호, "대북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참조.

폭 할인된 공공요금을 적용과 아울러 NGOs에 대한 기부 등에 있어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⁵⁰⁾ 특히 세금감면혜택은 NGOs에 대한 주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NGOs에 대해 기부나 현금시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임의단체 성격의 NGOs를 법인화하여 기업이나, 재단, 개인들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행대로 하면 기업이 비료나 옷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위한 모금의 활성화가 어렵다. 따라서 NGOs의 요구사항인 기부금품모금규제의 완화, 인도적 사업에 대한 세금면제혜택 등 적극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¹⁾ 현재 불우이웃성금, 실업자를 위한 기금 등의 모금에 있어 방송중의 자막을 통한 ARS 모금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ARS를 통할 경우 모금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NGOs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⁵²⁾, 통일기금형성 방법으로 ARS모금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⁵³⁾ ARS 방식은 또한 국민여론 차원의 홍보효과가 큰 대중적 방식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50) 성경룡, 김초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육성방안연구」, pp. 54-55.

51) 강문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

52) 「시민의 신문」, 제257호. 1998.

53) 통일관련 사업에 대해 ARS모금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던 1998년 4월의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금식」 행사에서 행사당일 은행공동구좌를 통해 2천7백만원이 모금되었는데 비해서 ARS를 통해서 2억 4천4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또한 1998년 6월 5일 북한어린이 등 굶주림을 겪고 있는 세계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방송과 「한국선명회」가 공동 주최한 '98 기아체험 24시간」에서는 전화모금액이 23억 7천만원에 달했다. 따라서 ARS 모금방식의 활성화는 통일관련 NGOs의 사업기금조성에 있어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마. 금강산 관광사업의 연계발전 및 추진분야의 개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일반주민의 대규모 방북을 실현시킴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관광뿐만 아니라 체육교류와 병행함으로써 여타 사회문화 교류·협력과의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로 연계·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금강산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관광을 점차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남북관광교류를 백두산, 묘향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현재 남북한 환경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금강산과 관련한 환경분야 정보 및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이를 북한산림녹화⁵⁵⁾ 등과 연계하여 점차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⁵⁶⁾ 북한지역 산림녹화는 민

54) 2000년 상반기중 속초-포시에트(러시아)-훈춘(중국)항로가 개설됨으로써 백두산 지역에 대한 새로운 해륙로가 개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천-단둥-심양-연길-백두산 코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백두산 관광이 보다 용이해 지는 동시에 북한의 관광지역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5) 북한의 산림중 상당부분이 무분별한 벌목과 다락밭으로 개발돼 황폐화했으며, 이 면적은 150만~200만ha로 서울시면적의 25~30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또한 이 산림 황폐 면적을 복구하는 데는 14조원의 경비와, 17년의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민성, 「북한의 황폐산림과 평화의 숲 운동」, '99 서울 비정부기구(NGO) 세계대회 '국제 산림환경 문제와 NGO의 역할' 토론회 보고서, 1999.10.12. 따라서 북한지역 산림녹화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6) 이미 99년 6월에는 남한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방제전문가 4명이 방북 금강산에서 금강산 지역의 솔잎혹파리 남북한 공동방제 문제를 협의하고, 시범방제를 실시한바 있다. 남북한이 공동 실시한 이 방제사업은 99년 10월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방제결과 확인을 위한 방북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9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남북한의 환경전문가간의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 회의에는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보호연구소 부소장과 남한의 대북 입업지원 단체인 평화의 숲

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⁷⁾ 특히 학술교류의 빈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왕래교류형태의 학술교류는 극히 저조한 상태인바, 금강산 관광과 관련, 금강산지역에서의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유람선에서 선상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금강산 지역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방북 공연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금강산 자동차 랠리 등과 같은 사업성이 있는 교류·협력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체육분야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성과가 크고, 실현성이 높은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통일농구대회를 정례화하는데 주력하고 이미 축구·탁구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협의된 만큼, 각분야의 서울·평양교환경기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당장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참가와 월드컵축구의 북한 분산개최 등에 대해서 남북간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교류에 대한 여론도 매우 긍정적인 편이므로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은 산림녹화를 위한 각종 자재 지원을 요청한바 있다. 따라서 남북한 임업교류를 통한 대북 산림녹화 및 방제지원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한 환경분야의 교류 및 지원에 대해서는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북한환경개선 지원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57) 1998년 10월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이 주축인 「동북아 산림포럼」이 발기인대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동북아 산림포럼」은 중국과 몽골,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국제적 공동전선구축을 목표로 유엔개발계획, 북경대 환경연구소, 일본, 홍콩, 대만 등의 국제식목단체들과 대상지역에 대한 식목 국제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북아 산림포럼」에는 환경운동단체관계자, 교수, 임업분야관계자, 언론계인사 등이 참가하고 있다.

를 목표로 하여 경험과 연계·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실천 방안으로는 99년에 성사된 교환경기 등을 점차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스포츠정보교환, 체육학자 및 경기지도자 등의 교환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체육학술정보의 교환, 경기력향상, 스포츠의학,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이익이 되는 스포츠교류가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통일체육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의 스포츠 시설을 마련하여 남북대표선수들의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 남북청소년 스포츠교류 장소로의 이용한다. 스포츠공원형태로 만들고 점차 시설을 확충 국제관광코스나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설치장소로는 상호 부담이 적고, 상징성이 높은 비무장지대가 좋을 것이며, 금강산관광지역 등 북한의 개방지역도 고려해 볼만하다. 장기적 실천방안으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한국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다. 남북 체육교류가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를 향한 민족공동체적 접근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바, 남북한의 현실과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여 복지사회형 체육을 실현시켜나가 나가야할 것이다.⁵⁸⁾

금강산 관광사업 등 지금까지의 사회문화 교류·협력과의 연계 및 확대 발전과 아울러 새로운 추진분야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이 활발했던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남북한간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동서독의 경우 청소년 단체간의 교류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단기간에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집단적 교류형태로 진행되어 양적 차원에서 인적 교류확대에 크게 기여했다.⁵⁹⁾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도

58) 안민석 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1998. pp. 170-177.

청소년분야의 특성 및 선호도를 고려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⁶⁰⁾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를 보다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도시간 자매결연이 활발했던 동서독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적극 검토하고, 지자체차원의 자율적 교류·협력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59) 1987년 동독의 127개 청소년 단체와 3,760여명의 청소년이 서독을 방문했으며, 서독의 경우 이는 4,900단체 7,7000여명에 달했다. Werner Weidenfeld & Karl-Rudolf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 Bildung, 1993), p. 367.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46-47.

60) 최근 민화협이 한길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 남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스포츠경기(39.3%)와 컴퓨터통신 (38.4%), 노래와 춤(25.7%) 등이었다. 「중앙일보」, 1999.12.7.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청소년 교류 및 정보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을 통한 청소년 교류가 성사될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조한범, “남북한 청소년정보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제29차 회의 발표, 1999.11.24

VII. 결론

국민의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탈냉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북을 통한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속에 상징성이 큰 공연과 체육경기가 방북을 통해 성사되었으며, 북한 농구 선수단의 남한방문도 이루어 졌다. 또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협력사업들이 민간분야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보여지듯이 관광목적상의 일반 주민들의 대규모 수시방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과거와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데 힘입은바 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교류·협력의 영향,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실리추구정책으로의 전환과 제한된 개방화 정책의 추진, 그리고 지구촌차원의 냉전구조해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중요한 특징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적 변화의 영향을 작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측은 예년과 달리 1999년 신년 사설에서 남한의 대북정책과 교류·협력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으며, 특히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지속되었다.

이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단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민간분야의 자율적 접촉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시장의 논리가 점차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대북포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수요도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산에 대한 긍정적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다양화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한 교류·협력과 사업성이 있는 문화·예술교류와 축구·농구 등 체육교류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 및 체제위기심화를 우려하고 있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제적 측면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은 교류·협력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선별적으로 응하는 한편 점차 과도한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되, 상징성과 남북한의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족적 사업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분야의 과당경쟁 및 비정상적 교류·협력추진을 억제하되, 정경분리 원칙의 확대적용을 통해 사회문화교류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분야의 자율적 교류·협력을 장기적 차원에서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측의 자세변화추이를 주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민간분야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의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양적·질적 차원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에서 효과적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아직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생소한' 남한사회도 새로운 인식이 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마련과 시민사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방향성은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넘어, 이질화의 해소와 남북한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상호이해를 확대하여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원택, “금강산 관광의 북한주민의식 변화에 대한 영향”,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경협』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9)
- 국토통일원, 「7·7특별선언 1년 통일정책보고」, 서울, 1989.
- 국토통일원, 「7·7특별선언과 남북한 관계설정의 위상 제문제 및 그 전망」, 서울, 1989.
- 국토통일원, 「7·7특별선언 2년」, 서울, 1990.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개요」, 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2.
-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영윤,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수첩」, 서울, 1994.
- _____. 「사회문화공동위수첩」, 서울, 1995.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 서울, 1994.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1998.
-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1996,
- _____. 「북한환경개선 지원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안민석 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체육과학연구원, 1998.
-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 1999.
-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조한범,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1996.
-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서울, 1999.
- 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동향 분석」, 1997.
- Ritzer, G. et. al. *Sociology*. Allyn & Bacon, 1979.

2. 논문

- 강문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8년 하반기 정책집담회 주제발표논문, 1998. 10. 13.
- 김학성, 「금강산관광객 방북 안내교육 개선방안」, 통일교육원 세미나 발표문, 1999.6.

- 이은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 이흥균. “시민사회와 비정부조직”. 김혁래 외.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향』, 서울: 경제정의실천연합, 1997.
- 조민성, 「북한의 황폐산림과 평화의 숲 운동」, '99 서울 비정부기구(NGO) 세계대회 '국제 산림환경 문제와 NGO의 역할' 토론회 보고서, 1999.10.12.
- 조한범,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1998.
- _____, “남북한 청소년정보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제29차 회의 발표, 1999.11.24
- 전효관. “통일관련 시민단체 역할의 새로운 방향모색”.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1998.
- 제성호. “대북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자료집, 서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8.
-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3. 기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및 인도적사업동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협력기금법」

「연합통신」

「시민의 신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범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동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증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교류협력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4 팩시밀리 901-2543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ISBN 89-87509-91-5

가격 4,500원